

지방계약법 규제 강화에 건설엔지니어링업계 ‘뿔났다’

행안부, 감리·설계 업체 입찰제한기준 강화안 지난 8일 입법예고...업계, 법적 대응으로 시행 저지할 것

최남영 기자

입력 2024-01-15 06:00: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격하게 분노하고 있다. 입찰참가 문턱을 높인 기준이 명확지 않은 데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사실상 중복 규제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는 해당 개정안을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강행 의지가 높다고 판단, 법적 대응으로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관계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준 신설과 제한 기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시공에 대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또 부실 설계로 시설물 보강·붕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새로 규정한 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년1개월이다.

여기에 대해 행안부 측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붕괴 등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라며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이번을 계기로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생각은 다르다. A엔지니어링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만 보더라도 처벌수위를 이전보다 높였지만, 현장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대가 현실화 등을 통해 설계·감리 품질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B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감리 부분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로 늘렸는데, 대체 상향 조정에 대한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행안부에 왜 최대 13개월로 늘렸는지를 물어봤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비교적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약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1년여간의 입찰참가제한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C엔지니어링사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률상 중복 규제, 포괄위임 금지, 포괄 재위임 금지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부당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까지 나서는 건 중복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업계는 법적 대응으로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다수의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들은 공동 제소 방식으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처분취소청구소송(본안)을 동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장은 관련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D건설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펴는 정책을 보면 대부분 이 공언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사업대가 현실화 등을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씌우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전문기자 리뷰] 거꾸로 달리는 ‘지방계약법’

○ 하종숙 기자 | ○ 승인 2024.01.12 15:34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크게 강화, 업체 존폐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행안부가 업계와의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일관, 일방통행으로 밀어부쳐 윤 정부 ‘무소불위(無所不爲) 행정안전부’라는 지탄의 대상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위해 ▲부실감리시 입찰참가 제한-현행 2-4개월에서 ‘5-7개월,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등 상향 ▲부실설계시 입찰참가 제한-‘5-7개월 미만, 11-13개월, 2-4개월’ 3건 신설 등을 각각 예고했다.

이에따라 감리부문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는 현행 2-4개월에서 11개월-1년1개월로 ▲부정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는 현행 2-4개월에서 5-7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한 설계부문에서는 3건이 신설됐다.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해 붕괴돼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해 시설물 붕괴를 야기한 자(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해 시설물의 보강을 야기한 자(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등 3건이 신설된 것.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은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처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이번 규제 강화는 관련업계를 아사 위기로 몰아넣는 사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1년1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사실상 업체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 무엇보다도 부정당업자 지정시 공공입찰 전체 올스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야기, 궁극적으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LH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건설부실 근절은 물론 건설안전 강화가 대두,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행안부의 의지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강력한 제제만을 내세운 이같은 조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일 뿐만아니라 행안부 실적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심사를 하고 벌점 부과는 국토부가 해야 하는 구조이고 보면 행안부가 컨트롤하는 이른바 책임은 없고 권한만 휘두르는 권력 남용이란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우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근절, 건설기술 변별력 확보, 발주처의 책임의식 확대 등 업계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에 부합한 행정 처리가 촉구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종숙 기자


부실설계 시 입찰 제한...강력해지는 행안부 철퇴

기사입력 2024-01-12 05:00:2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잇단 규제성 정책에 업계 법적 대응 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설계	부실설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붕괴를 야기한 자(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을 야기한 자(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감리	부실감리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부실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2~4개월 → 5~7개월, 11~13개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실설계 업체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설계 문제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행안부의 연이은 규제성 정책 추진에 불멘소리를 높이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설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해 붕괴 또는 보강을 야기하거나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때 최대 1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부정 시공에 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부실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에 따라 지방계약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편익이 부실설계·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보다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행안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내놓으며, 업체 및 기술인에 대한 벌점 감점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PQ(사업수행능력) 평가 요소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283개 업체가 연대 탄원에 나서면서까지 저지하려던 사안이다. 과도한 규제적 요소이자 자칫 관(官) 카르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최근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해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등을 추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맞물려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의 규제나 다름 없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안전 및 품질을 도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제안서 평가도 아닌 PQ(사업수행능력) 평가만 가지고도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종속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며 “처벌만 강화하면 안전이나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지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지 고강도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반발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행안부 입찰참가제한 규제영향분석서, 명백한 허위사실”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1.15 15:59

업계 “명시된 근거는 탄원서...당시 내용엔 없어”
“현재 입법예고 기간...통과시 법적 대응 불사”

■엔지니어링 업체 <23년 8월 탄원서 내용>

- 1 종평제 도입
 - 2 PQ 자율권 부여
 - 3 부실 벌점 강화
- 283개 업체 참여**

■행안부 <규제영향분석서>

부실설계업체 입찰 참가제한
“**3,735**개사 중
283개 업체 **반대**”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안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추진중인 부실설계업체 입찰참가제한을 두고 입법 통과를 위한 허위사실을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결격 사유가 분명한 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부실설계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경우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행안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설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부실설계·감리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일 수준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실설계 사유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3개월까지 입찰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안전대책 소홀로 2명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11개월~13개월의 초강도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업체의 경우 시공업체에 비해 제재 기간이 경미하므로 시공사와 동일 수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시공업체는 5~13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이 적용되고 감리업체는 2~4개월을 받는데 이를 시공사 기준으로 일치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부실설계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해석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가령 설계서상 철근 7개만 넣으면 구조적으로 100% 안전한 시설물이 무너졌다고 하면 8~9개 안췄다고 설계사한테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입찰참가제한은 회사 입장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행안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건축업계의 비위가 토목업계로 억울하게 전가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행안부는 LH 사건을 근거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건축업계의 비위에 토목업계가 얻어맞고 있는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부실설계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를 들이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규제영향분석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살펴보면 행안부는 ‘기술용역업체 3,735개사 중 283개사에서 업계 부담을 이유로 별도 대안 제시 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C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숫자의 근거는 예규 개정 탄원서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면서 “행안부는 관계 없는 사안을 끌고와 마치 업계가 카르텔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난해 8월 종평제 도입과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부실벌점 강화 도입 반대에 대해 283개 업체가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아울러 업계는 당시 탄원서에서 해당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예 논의된 바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다음달 2월 14일까지 예정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반대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전달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PQ자율화와 부실 벌점 강화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항일 기자